

대통령 환경복지구상의 의의와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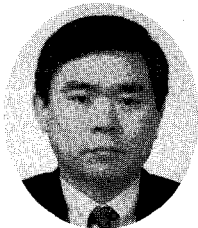
대통령의 환경복지구상은 현대를 환경위기의 시대로 규정하고,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가장 중요한 의제임을 강조하는 환경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공동체 건설을 통하여 녹색환경국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5대 원칙과 7대 정책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학계나 민간환경단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서 대의적으로는 환경과 무역의 연계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최근 상당한 환경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경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환경을 방치할 수 없다는 최고통치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지난 30여년 동안 성장위주 정책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입각한 정책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난 3년 동안의 정치, 경제, 교육개혁에 이은 또하나의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환경복지구상은 먼저 인간은 자연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생태계의 파괴는 곧 인간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그동안 인간은 자연을 무한한 자원

의 보고로만 인식하고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끊임없이 파괴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지구는 병들어 갔고 급기야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인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수용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징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몇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환경위기를 함께 느끼고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의 구상은 공동책임과 생활속의 실천 원칙을 설정하고,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와 환경교육의 강화를 정책기본 방향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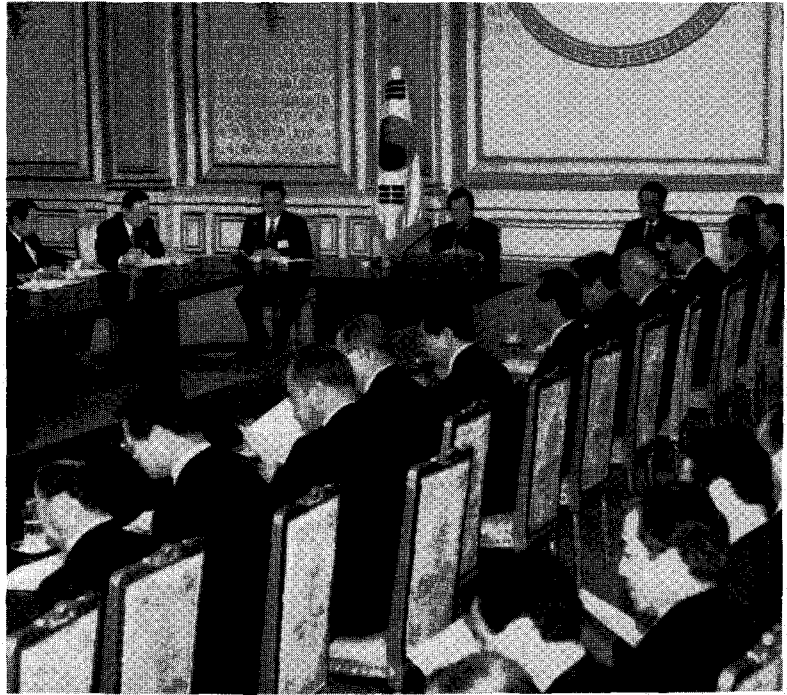
그러나 자연환경은 공공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은 항상 무임승차하려는 동기를 갖게 마련이고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모든 정책수행과정에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통합의 개념으로 인지하며, 사전예방과 오염자 부담원칙을 확립한다는 원칙이 제시된 것은 민간부문의 발상전환을 유도하면서 국내환경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린라운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환경자



김일중
동국대 무역학과 교수

치체제를 확대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환경을 가꾸고 관리하도록 하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녹색 GNP의 개념 도입과 정부의 환경관리 기능의 통합 조정을 통하여 정부의 환경관리 기능을 강화 내지는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규제기준강화 및 오염물질 총량규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경제적 유민제도의 시행의지도 이 구상 속에 함께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정책의지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 중 보전 우선의 정책으로, 중앙집권적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에서 지방분권적·시장경제적 정책으로 그리고 정부부처간 이해대립으로 인한 비효율적 행정에서 효율적 행정으로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국경오염문제와 지구환경문제는 국내 환경문제 및 무역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남북한 및 국제환경 협력강화가 5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환경공동체 형성 노력을 기울이며 국제환경협약 이행에 앞장서는 환경외교의 강화가 정책 기본방향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대통령 환경복지 구상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선언으로만 그칠 수 있다. 1972년의 몬트리올 환경선언이 제3세계의 반발에 부딪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1992년 리우회담 이후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논의가 각국의 이해관계로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의 많은 환경정책 대안들이 경제문제와 맞물려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실에 입각한 정책수단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환경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재원조달은 바람직하지만 재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안전이 보장되는 수준만큼의 환경기초시설이 확립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환경세의 도입을 고려하거나 환경예산의 대폭 확충이 요구된다.

한편,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위해서는 녹색 GNP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환경통계자료를 생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은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시작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통계의 뒷받침 없이는 올바른 정책이 수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환경통계는 각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작성되어지고 있고, 대부분 여타 경제통계자료와 함께 사용될 수 없는 물리적 자료이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를 연계

환경문제는 몇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환경위기를 함께 느끼고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의 구상은 공동책임과 생활속의 실천 원칙을 설정하고,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와 환경교육의 강화를 정책기본 방향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시킴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자료가 작성되어야 하며, 통계작성도 통계청으로 일원화하고 환경통계 전문가의 양성 및 충원이 필요하다. 또한 UR 협상 때 밝혀진 일이지만 우리나라에는 협상전문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켜주는 중요한 통계자료 및 이에 관한 연구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선진국과의 협상태이블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발하고 현실적인 실천대책과 우리의 입장을 협상내용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환경외교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통계자료의 축적이나, 환경과 무역에 관한 전문가 및 통상전문가의 육성은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착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정책 수석비서관 제도를 신설하여 환경관리 통합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환경부 내에 환경과 경제의 양면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를 양성 보강하고 이들로 하여금 환경과 경제의 통합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나라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수혜자와 손해를 보는 피해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기업은 국제경쟁력의 악화문제로 환경규제 강화에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환경비용의 총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불만을 갖기보다는 다가오는 환경의 세기에 걸맞는 환경친화적 기업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WATER ENVIRONMENT FEDERATION

미국 수질오염방지기기박람회 참관 및 산업시찰단 모집

환경경영 친화적 체제 구축 및 ISO 14000으로 환경과 무역을 동일선상에 놓고 각 기업체는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본연합회는 선진국의 환경기술을 습득하여 현재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국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미국 달라스에서 매년 WATER ENVIRONMENT FEDERATION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수질오염 방지기기 박람회 참관 및 환경관련업체를 방문하여 조금이나마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로 삼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아 래-

1. 참가기간 : 1996년 10월 6일(일)~10월 13일(일)/7박 8일
2. 개최장소 : 미국 달라스 CONVENTION CENTER
3. 전시내용 : 폐수 및 유해폐기물 처리장비, 화학처리시설, 컴퓨터 소프트웨어, 펌프 기술서적, 학회발표 등
4. 모집인원 : 40명 선착순(부부동반도 가능)
5. 문의처 : 본 연합회 사무국
전화: 837-1964/5 전송: 867-8474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